
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24.

발 의 자 : 서일준·권영세·백종헌
조승환·박성민·우재준
이상휘·권성동·안상훈
정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·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한편,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관광·휴양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,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,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·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특히, 2017년에 도입한 해양관광진흥지구의 경우 중앙집중형 승인제도와 복잡한

절차로 인하여 아직까지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.

이에 개발구역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, 지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12조, 제15조, 제20조의2 및 제23조).
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, “관계 중앙행정기관”을 “관계 행정기관”으로,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”를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”로, “중앙도시계획위원회”를 “지방도시계획위원회(이하 “지방도시계획위원회”라 한다)”로, “,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”을 “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, “주민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주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역이 둘”을 “둘”로, “걸치는 경우에는 해당”을 “개발구역이 걸치는 경

우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”으로, “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”를 “된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이”로 한다.

이 경우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이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“국토정책위원회”를 각각 “지방도시계획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전단 중 “시·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, “국토정책위원회”를 “지방도시계획위원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22호 중 “허가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,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)”를 “허가”로 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”를 “시·도지사는

시장·군수·구청장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3호 중 “제7조제1항, 제9조제1항, 제12조제3항, 제24조제1항”을 “제2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개발구역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·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「자연공원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(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,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)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	제7조(개발구역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-----관계 행정기관----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-----지방도시계획위원회(이하 “지방도시계획위원회”라 한다)----- -----를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<단서 삭제>

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·고시하는 때에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때 지정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
<후단 신설>

주민-----.

⑤ 시·도지사는-----

⑥ 둘-----개발구역이 걸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권자는 개발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행정구역이 포함된-----된다. 이 경우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

⑦ (생략)

⑧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「건축법」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하고, 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개발구역에 「자연공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「건축법」 제69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⑨ · ⑩ (생략)

제8조(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) ①
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
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
개발계획의 내용 중 「환경영
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전략
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
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
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
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

한다.

⑦ (현행과 같음)

⑧ 시장·군수·구청장이-----

⑨ · ⑩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) ①

시·도지사는-----

[illegible]

_____.

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가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개발구역 지정의 해제) ①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개발계획이 수립·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

2. 3. (생략)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이-----

제9조(개발구역 지정의 해제) ①

-----지방도시계획위원회-----

-----지방도시계획위원회-----

1. -----

시장·군수·구청장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개발계획의 승인 등) ① 시·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 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,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시·도지사

-----.

제12조(개발계획의 승인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-----
-----.
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·도지사는-----
-----지방
도시계획위원회-----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인·허가등의 의제)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·인가·지정·승인·협의·신고 등(이하 “인·허가등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·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
1. ~ 21. (생략)

22. 「자연공원법」 제20조에
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
업의 시행 허가(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유선장, 탐방로
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
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
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
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

경우에 한정한다)

23. ~ 43. (생략)

② ~ ⑤ (생략)

제20조의2(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,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시·도지사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·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

23. ~ 4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) ①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-

-----.

② 시·도지사는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경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
에 각각 필요한 다음 각 호의
절차를 절차별로 일괄하여 이
행할 수 있으며, 해양관광진흥
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
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.

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
협의

2.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
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
 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
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
 려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⑥ (생략)
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
 진흥지구가 제9조제1항 각 호
 의 사유 외에 제5항제3호에 따
 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
 경우에도 해당 해양관광진흥지
 구를 해제할 수 있다.

제23조(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
 권 발전기획단) ① (생략)

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

⑤ 시·도지사는-----

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시·도지사는-----

 -----.

제23조(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
 권 발전기획단) ① (현행과 같
 음)

② -----

한 업무를 수행한다.	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6조제1항, <u>제7조제1항</u> , 제9조제1항, 제12조제3항, 제24조제1항,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의안 작성 등의 보좌	3. ----- <u>제24조제1항</u> ,-- -----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